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 요인분석: 북한이탈주민 FGI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신재은* · 조문영** · 이석원***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사회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
- III. 독일통일 사례분석
- IV. 탈북자 대상 FGI 연구
- 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남북통일이 실현되었을 경우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변수들을 이론적 고찰과 독일통일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FGI 조사를 수행하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으로 구분한 Krechel(1999)의 연구에 기반하여 통일 이후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지 예측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독일통일 사례 실증적 연구 결과 또한

Krechel의 연구에 기초한 이론적 틀과 일관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FGI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에 대한 촉진 및 저해 요인을 예측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남북통일, 사회통합, 북한이탈주민, 체제통합, 가치통합

* 제1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 참여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수료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장기화된 분단으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상반된 두 갈래의 정치 체제와 경제체제에 기반한 독자적인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이질적인 사회, 문화, 생활방식 등으로 표출되어 통일 이후 여러 사회적 문제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질적인 국민 정체성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i.e. 독일통일 사례나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과정 등) 확인된 바 있다.¹ 북한 내부에서는 지속된 재정난으로 인한 시장화와 사경제(비공식 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² 한국 드라마 등 외부의 정보와 문화 콘텐츠의 유입으로 인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과 자유 의식의 확산 등이 감지되고 있지만,³ 이런 내부적 변화는 북한 내 지역별(국경 및 평양 주변 vs. 타 지역) 및 계층별(간부 계층 vs. 일반 계층)로 차이가 심하며, 북한은 여전히 철저히 폐쇄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이질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과는 다른 정치 및 경제체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이념적 불일치를 극복하기에 부족한 민족적 동질성이 사회적 통일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 및 사회적 통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순한 체제 통일 이전에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남북 간 사회적 통합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사전적 식별,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 추구되어야 하는 사회통합은 체제의 통합과 사회 가치적 통합이

¹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271~300;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3집 1호 (2014), pp. 101~126; 윤인진,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서울: 아연출판부, 2014), pp. 310~325.

²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현하려면, ① 재산을 보호를 위한 법·제도, ② 금융 시스템, ③ 거주이전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노동시장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투자와 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아 지속적 경제성장이 어려운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제도 바깥에 머물러 있는 소규모 생계형 경제활동이 흔하며 이를 가리켜 비공식 부문 또는 비공식 경제라고 부른다.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9.

³ 김석진,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집 1호 (2019), pp. 33~78.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흔치 않은 사례로 이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으로는 독일통일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는 이민자들의 새로운 거주지 적응 및 사회적 가치 통합을 개인(individual)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 역시 개개인의 적응과 정착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동안 당연히 여겨오던 그들의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신념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과 관계를 맞이해야 하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개인 단위의 사회통합과 적응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동 연구는 한반도 통일 가정하에 통일 과정과 그 이후 남북 간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례연구 및 면담조사 등 추가 연구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체제통합과 사회 가치적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인 독일통일 사례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남북 통일 과정에서 고려할 만한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 집단초점면접(FGI)을 실시하여 실제 북한 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와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데 있어 마주했던 어려움과 향후 남북통일이 현실화 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접근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독일통일 사례분석과 북한이탈주민 FGI 결과 도출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비교 및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단일화 된 정부에서 효과적인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과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II. 사회 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개념

원론적 수준에서 통합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들이 단일한 체제에 속해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간의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⁴ 즉,

⁴ Deutsch, K.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8), pp. 85~156.

사회통합은 단지 정치/사회/법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및 체계적 통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및 생활 방식에 대한 공동의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통합을 의미한다.⁵ 하지만 사회통합은 논의 배경과 관점에 따라 개념정의와 분석단위, 그리고 통합 수준의 측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학계 내에서 하나의 통일된 정의와 지표를 찾기 어려운 것이 정설이다. Robinson(1998)은 사회통합의 개념은 개인화되고 논쟁적이고 맥락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⁶ 실제로 사회통합의 개념은 사회구조적 차원의 체제통합에서부터 개인 차원의 사회적응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범주를 다루고 있다.⁷ 사회구조적 통합의 경우는 하나의 사회 내 다수 하위체계가 공동으로 공유하는 질서에 기반하여 단수의 체계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차원의 사회통합은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는 통합과정을 의미한다.⁸

기존의 사회통합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개인 차원의 사회통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로 이민이나 귀화에 의해 새로운 사회에 진입한 개인의 ‘통합(Integration)’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 분석 혹은 통합 수준의 측정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민자들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들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의 나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수준, 새로운 거주지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의사결정과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식별에 집중되어 있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개인이 이민 전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이 이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인의 의사결정(예: 거주지역, 구독하는 신문의 종류, 친구 관계, 결혼, 직업 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원론적 논의는 Landecker(1951)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그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문화적

⁵ 윤인진,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pp. 310~325.

⁶ Robinson, V. *Defining and Measuring Successful Refugee Integration*. Proceedings of ECR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ion of Refugees in Europe (Brussels: ECRE. November 1998). pp. 9~16.

⁷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pp. 101~126.

⁸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2호(2010), pp. 269~288.

⁹ Bisin, A., E. Patacchini, T. Verdier, and Y. Zenou, “Are Muslim immigrants different in terms of cultural integration?,”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6, no. 2-3 (2008), pp. 445~456; Hainmueller, J., D. Hangartner and G. Pietrantuono, “Catalyst or Crown: Does Naturalization Promote the Long-Term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1, no. 2 (2017), pp. 256~276.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구분하며 개인의 문화적 기준과 이에 기반한 결정과 행태, 그리고 개인 간 상호관계에 사회통합 개념의 중점을 두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이민자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인 차원의 사회통합 연구는 다만 그들이 새롭게 진입하게 된 사회의 정치나 경제체제 순응과 적응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민자나 귀화자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 자발적으로 진입한 만큼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순응은 이들의 사회통합 과정에 있어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uropean Commission의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이나 귀화자들의 경제체제 적응과 실제 경제적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의 주민들과 동등해 진다고 밝혀졌으며, 이는 이민자들이 새로운 거주국의 체제와 제도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행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통합의 관점에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문화적 융합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진 바 있다.¹¹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가정한 사회통합의 논의는 개인 차원의 적응과 통합을 넘어서 체제 차원의 통합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통합된 체제에 대한 이해와 순응을 무조건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형태의 사회통합임이 인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Krechel(1999)의 이론은 본 연구에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Krechel(1999)은 사회통합의 하위범주를 크게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다. 체제통합의 경우 정치 사상과 경제 제도의 통합을 의미하며, 가치 통합은 이와 같은 체제통합을 통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¹² Krechel이 얘기하는 체제통합은 단순히

¹⁰ Landecker(1951)는 사회통합의 개념을 문화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화적 통합은 문화적 기준의 일관성을 뜻하며, 사회적 통합은 구체적으로 1) 규범적 통합 2) 의사소통적 통합 3) 기능적 통합으로 나누고 있다. 규범적 통합은 문화적 규범과 인간 내의 행위간의 일치를 뜻하며, 의사소통의 통합은 구성원간의 합의의 수단을 의사소통으로 보아, 이러한 의사소통 네트워크가 사회체제 내를 관통하는 수준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기능적 통합은 고도로 전문화, 분절화된 노동 분업의 단위객체들 간의 공생관계 및 의존정도를 뜻한다. Landecker, W. S. "Types of Integration and Their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56, no. 4 (January 1951), pp. 332~340.;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pp. 101~126.

¹¹ 신효숙·김창환·설동훈·채정민·장인숙·왕영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 지수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pp. 33~51;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제6권 1호 (2019), pp. 61~92.

¹² Krechel, R.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9), pp. 85~95.

흡수 통일 등을 통한 단일 정치·경제체제로의 국가 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일 국가 혹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제대로 적응하고, 이에 순응해야 만이 비로소 체제통합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¹³ 또한, Krechel(1999)는 체제통합이 이뤄지더라도 반드시 가치체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¹⁴ 사회통합의 하위 범주인 가치통합을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의 개념에서 설명한다면, 사회통합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이를 통해 공동체 내의 삶에 적응하며, 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¹⁵ 앞서 언급했던 기존의 개인 차원의 사회통합 연구들의 문화적 기준의 일관성과 사회적 유대감 등의 내용은 가치통합에 가까운 논의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식별

Krechel의 이론은 독일통일이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상의 사회통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제시한다.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을 촉진 혹은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 이후 사회통합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도입 및 시행 가능한 정책 형성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식별하고 이들을 Krechel의 이론에 적용하여 체제통합 및 가치통합과 관련한 변수들로 재분류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 대상의 연구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회통합 지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다 구체적인 변수들을 식별하고자 하였다.

먼저 체제통합의 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은 구조적 차원의 체제통합 수준과 단일화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가정하였을 때, 국민들이 공통된 제도와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및 경제체제의 구축과 작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조적 및 제도적 단일화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체제통합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단일화 된

¹³ *Ibid.*, pp. 85~95.

¹⁴ *Ibid.*, pp. 85~95.

¹⁵ 오영훈·강일규·윤형한·유태균·김진옥, 『취약계층 평생직업훈련의 사회통합효과 분석(2편)』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pp. 21~37.

정치 및 경제체제로 공동체 구성원의 순응 및 적응 역시 체제통합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변수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국민들의 정서적 소속감이나 안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 권리 보장,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 기본사회 인프라(예: 상/하수도, 도로, 보건시설, 교육시설 등), 교육 및 보건 체계 및 제도 등의 수준과 지역별 격차가 체제통합의 수준을 측정하고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주요 변수이자 지표가 될 수 있다.¹⁶

궁극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의 국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정서적 응집성을 갖게되는 ‘가치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개인의 문화와 경험 등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 고유의 문화와 경험은 그들의 사회적 선호도와 믿음, 종교, 가족관계, 정치 참여도 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그들의 다양한 결정과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¹⁷ 문화의 범주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개인의 믿음과 사회적 선호도(예: 경쟁, 공정, 위험 회피도, 이타주의, 개인주의 등), 가족관, 성적 역할(gender role), 종교적 선호도, 정치관, 언어 등이 넓은 범주에서 개인 및 그룹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문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문화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은 개인 단위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도 식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사회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정책 개발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Laurentsyeva and Venturin(2017)은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리변수(Proxy)들을 일반 영역/문화영역/사회적 참여 및 수용영역/인구통계학적 요소/

¹⁶ Adsera, A., and A. Ferrer, “Factors Influencing the Fertility Choices of Child Immigrants in Canada,” *Population Studies*, vol. 68, no. 1 (2014), pp. 65~79; Bisin, A., E. Patacchini, T. Verdier, and Y. Zenou, “Are Muslim immigrants different in terms of cultural integration?,” pp. 445~456.; Gathmann, C. and N. Kelle, *Citizenship and Social Integration*, IZA Working Paper (Muenster: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2017), pp. 14~15;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pp. 61~92; Furtado, D. and S.J. Trejo, *Inter-ethnic Marriages and Their Economic Effects*, In A.F. Constant, K.F. Zimmermann (eds.), (UK: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Migration, Cheltenham, 2013), pp. 276~292.

¹⁷ Bisin, A., E. Patacchini, T. Verdier, and Y. Zenou, *Ibid.*, pp. 445~456.

¹⁸ Algan, Y., A. Bisin, A. Manning and T. Verdier, *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 2~43; Bisin, A., E. Patacchini, T. Verdier, and Y. Zenou, 위의 글; Cameron L., N. Erkal, L. Gangadharan and M. Zhang, “Cultural Integration: Experimental Evidence of Convergence in Immigrants’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111 (2015), pp. 38~58.

정치적 참여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시한 바 있다.¹⁹ 일반 영역의 변수는 정체성(self-indentification)이며, 문화영역의 변수는 앞서 언급한 문화적 요인들, 사회적 참여 및 수용 영역의 변수는 취미, 비이민자 친구 보유여부, 주거 지역, 인지하고 있는 차별수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결혼 연령, 비이민자와의 결혼여부, 이혼율과 출산율 등이며, 정치적 참여 영역은 정당 가입여부, 정부 기관 취업률, 선거 참여율, 정치 관심도 등이다. 물론 동 연구에서 지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치통합은 단일 국가 체제 내에서 공유되는 주요 가치들에 대한 이해와 사회 및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개인적 가치관과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Alastair Ager and Alison Strang(2008)에 따르면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변수들은 ‘이민자 통합 모델(migrant integration model)’에 기반하여 식별하고 있다.²⁰ ‘이민자 통합 모델’은 1) 통합의 토대, 2) 촉진요소, 3) 사회적 관계, 4) 표식과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의 토대는 이민자가 국민으로서 지니는 법적 권리와 시민권 보장으로 이를 통합의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촉진요소는 언어 문화적 지식 및 사회적 안정감으로, 거주국의 언어를 포함한 문화 습득 여부, 사회에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다. 사회적 관계는 이민자가 거주국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결속되고, 수용되는 수준으로 식별하며, 체제상의 통합 요소로는 고용, 주거, 교육, 보전이 포함된다.²¹

한국에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바라보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남북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총론적 차원의 의견일 뿐, 구체적으로 사회통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수 관련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효숙 외(2019) 및 윤인진(2019) 등에서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적용 가능한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 분석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²² 특히,

¹⁹ Laurentsyeve, N. and A. Venturini,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 Role of Policy - A Literature Review," *Intereconomics*, vol. 52, no. 5 (2017), pp. 285~292.

²⁰ Ager, A. and A. Strang,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21 no. 2, pp. 166~191.

²¹ *Ibid.*, pp. 166~191.

²² 신효숙·김창환·설동훈·채정민·장인숙·왕영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지수모형 및 측정 도구 개발』, pp. 33~51;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pp. 61~92.

윤인진(2019)의 연구는 사회적 갈등 인지 수준, 기회 평등 인식, 치안과 생활 불안감 등 사회심리적 차원의 변수들을 사회통합 측정과 촉진을 위한 주요 변수로 식별하고 있다.²³

상기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하단의 <표 1>과 같이 사회통합과 관련한 변수들을 분류 및 식별하였다. 하단의 표에 제시된 ‘식별된 주요 변수들’을 독일통일의 사례분석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FGI 분석에 주요 변수로 적용하여 사회통합과의 구체적 연관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 ‘사회적 통합’의 영역과 주요 영향 및 측정 변수

상위 영역	하위 영역	주요변수	출처
체제 통합	구조적 통합	• 법과 제도의 단일화, 행정 시스템의 구축, 사회 인프라 구축 등	Krechel (1999), 저자
	체제 순응 여부	• (정치체제 이해와 순응)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이해, 법 제도 관련 지식, 납세율, 선거참여율,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지식 등	Adsera and Ferrer (2014); Avitabile et al. (2013); Furtado and Trejo (2013) Gathmann et al. (2017); 윤인진 (2019); 저자
		• (경제체제 이해와 순응)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안정성, 직업, 소득 (추이) 등	
		• (기타 제도 순응) 초·중·고 이수율, 대학입학률, 의료서비스 이용률 등	
가치 통합	언어 및 문화적 요인	• 언어, 관습, 취미, 대중문화 및 언론매체 이해도, 가치관(종교, 성별 역할, 가족관 등), 정치 선호도, 위험 회피도(risk aversion) 등	Algan et al. (2013); Bisin et al. (2008); Cameron et al. (2015)
	사회적 관계와 결속	• 일반사회 조직 및 단체 참여도, 지역모임 참여, 출신지역 외 친구 여부,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선호도 (관대, 경쟁, 개인주의, 관계 지향 등), 이민 의사 등	Adsera and Ferrer (2014); Avitabile et al. (2013); Furtado and Trejo (2013) Gathmann et al. (2017); Hainmueller et al. (2017);
	인구 통계학적 요인	• 결혼 연령, 다른 출신지역/국가 주민과의 혼인율 및 이혼율, 주거지역, 가족구성원 등	신효숙 외 (2019); 윤인진 (2019)

*출처: 선행연구를 통해 저자가 재구성

²³ 윤인진, 위의 글, pp. 61~92.

III. 독일통일 사례분석

1990년 독일의 통일과 그 이후 독일의 사회 통합과정은 한반도 통일 이후 안정적 사회 통합 달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변수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기존 독일통일 사례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 남북 간 관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된 바 있다.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루어진 독일통일 연구들은 서독 중심의 일방적인 통합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개인의 사회적 통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방향성 관련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²⁴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나 남북통일 현실화 이후 사회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총론적 차원의 의견일 뿐,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정책적 시사점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독일통일 사례는 서로 다른 두 체제의 통합에 의해 사회적 통합이 요구되는 흔치 않은 사례로, 기존의 이민자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통합 연구에 비해 한반도 남북통일에 보다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하였던 주요 요인들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의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정치체제 통합

독일통일 이후 정치문화의 이질성에 의한 갈등은 체제통합을 위한 정치체제의 구조적 차원과 서로 다른 정치 이념에 기반한 가치 통합의 관점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 주민들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정치체제를 향한 갈망이 적극적인 개혁요구를 통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통일 이후 연방제가 시작되며 입법 및 행정상 갈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주민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만족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독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연방제 편입은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과 이로 인한

²⁴ 전성우,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집 (2000), pp. 5~29;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pp. 271~300.

구조적 및 조직적 갈등 등 체제통합 차원에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통일 이후, 중앙집권제가 아닌 행정연방주의에 기반을 둔 서독의 연방제를 동독에 적용 시킴으로써 구 동독은 지방행정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정병기, 1997).²⁵ 하지만 40년 동안 입법부 구성의 경험이나 행정적 자치경험이 없는 구 동독의 경우 서독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독식 행정체제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²⁶ 이와 더불어 서독의 지휘 하에 인사권이 발동되며 정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방송 등의 고위 관리직이 모두 서독 인사들로 교체되었으나, 이들이 동독의 풍습과 문화 관련 교육조치 없이 파견된 결과, 조직 내 인사 관련 갈등이 조장되었다.²⁷ 새로운 정당체제로 인한 갈등 또한 나타났는데, 정당들이 구 동독 지역의 문제들을 의제화 하고 해결하는 정치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새로운 정당문화에 적응해야하는 대중들에게 외면 받게 되었다.²⁸ 이러한 과정에서 동·서독 간의 지역 갈등이라는 새로운 균열구조가 발생하였으며, Lipset의 균열구조 이론(1967)에 의하면 이러한 균열구조는 새로운 지역주의 정당을 형성시키거나 기존의 정당이 지역주의화 시켜 지역갈등을 심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²⁹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한 정치적 가치정향 및 태도 또한 새로운 정치체제 적응과 사회 구성원의 가치통합 달성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콘라드아데나워 재단(Konrad-Adenauer)의 연구에 따르면 서독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 ‘자유’, ‘자유로운 의견표명’, ‘법치 국가와 민주주의’ 등 자유적 가치에 분명한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해, 동독에서는 ‘사회국가’, ‘소득격차 감소’ 등의 사회적 가치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³⁰ 이는 앞서 식별하였던 변수들 중 가치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사회적 선호도와 정치적 선호도의 이질성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이질성은 통일 전·후로 긴박했던 정치체제의 변화와 빠르게 진행된 통일 과정에 따라,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의 불충분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²⁵ 정병기,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1997년 여름호 (1997), pp. 61~86.

²⁶ 서병철, “독일 정치통합의 과정과 원동력,” 『통일문제연구』, 제5권 4호 (1993).

²⁷ Axel Schmiat-Gödelitz., “독일통일 후 내적통합: 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제4호 (2012), pp. 1~8.

²⁸ 정병기,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pp. 61~86.

²⁹ 위의 글, pp. 61~86.

³⁰ Veen, Hans-Joachim, and Zelle, Carsten,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Priorities in Eastern and Western Germany,” *German Politics*. vol. 4, no. 3 (1995), pp. 1~26.

민주주의에 대한 이질적 개념은 통일 이후 구 동독의 민주주의의 기능화의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일체감과 사회적 결속의 부재를 발생시키고 가치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통일 이후, 동독에서는 고용 불안정, 사회 복지 서비스의 손실 등의 문제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발생하며, ‘자유·안전·정의’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불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다.³¹ 반면 서독 주민들은 연방공화국에서 ‘생활 형성 및 직업 선택의 자유’, ‘공공 및 사회 안전’, ‘기회균등’, ‘복지의 공정한 배분’, 그리고 ‘빈곤자와의 연대’가 민주주의를 통해 가능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³²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정치체제 하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국가체제의 신뢰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경제체제의 통합

동·서독 간 경제 통합은 서로 다른 경제체제와 경제적 격차를 가지고 있던 두 지역이 화폐통합, 사유화 정책, 산업구조 개편 등의 과정을 짧은 시간 안에 급진적으로 겪으면서 여러 구조적 한계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일 이전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기술발전정체와 노동자의 창의력 개발 부족 등의 이유로 통일 이후 동독기업의 산업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이는 화폐통합에 따른 임금 상승과 맞물려 동독 주민들의 대량실업 및 불완전고용 문제를 초래하였다.³³ 실제로 통일 직후 서독의 GNP는 4.6%의 성장을 이룬 반면, 동1990년 8월부터 10월까지 월간 산업 생산력은 전년도 대비 51%나 감소하였다.³⁴ 동독 지역으로의 자본 투자 또한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산업화가 정착하기 전에 탈산업화가 진행되어 동독 지역경제는 서독 지역경제에 대한 종속 및 대체 경제의 형태로 머무르게 되었고, 이는 사회경제적 균열을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³⁵ 반면 서독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투자 및 보조금 지원이 증가, 그리고 경제체제 전환에 필요한 통일비용의 부담에 따라 서독의 재정조달

³¹ *Ibid.*, pp. 1~26.

³² *Ibid.*, pp. 1~26.

³³ 송태수, “유럽연합 이민정책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제39권 (2009), pp. 43~68.

³⁴ Collier, I. L., and Siebert, H. *The Economic Integration of Post-wall Germany* (Kiel: Kiel Inst. of World Economics, 1991), pp. 8~10.

³⁵ 정병기,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pp. 61~86.

부담이 가중되었다.³⁶

동·서독 간 경제통합 과정에서 구조적 통합 차원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주민 간의 인식차이로 인한 사회적 관계와 결속의 문제, 문화적 요인인 가치관의 문제 또한 대두 되었다. 특히, 동·서독 주민 간의 경제적 가치관 차이가 부각되었는데, 예컨대 서독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 및 자율성과 같은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은 동독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수동적인 사고방식과 크게 대조되었다.³⁷ 특히 동독 주민의 경우, 경제통합 과정에서 도입된 사유재산제, 자유경쟁 등의 시장경제원리가 큰 이질감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전 국가 주도하에 완전고용원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동독 주민에게 전문 능력의 필요성과 요구, 생산성 기반 임금 지불, 자유경쟁에 따른 실직가능성, 기존 공공제도의 해체는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새로운 체제 순응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보인다.³⁸ 그에 반해 서독 주민은 경제통합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와 함께 노동과 시장경제 관련 가치관 차이로 동독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 되었다.³⁹

3. 사회적 영역에서의 체제통합과 가치통합

동독과 서독은 통일 이후 정치와 경제 분야 외 가족관계와 여성의 사회활동, 교육, 가치관 등 사회적 영역에서도 여러 갈등을 겪었다. 교육체계 등 제도상의 통합이 이루어지며 구조적 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가치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에 의한 갈등이 드러났다. 동·서독 주민 간 언어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분단 기간 동안 자리 잡은 가치관의 차이가 통일 이후 여러 사회적 의사결정과 행태에 반영되며 여성 실업률, 보육 문제, 직장 내 갈등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념의 차이로 비롯된 교육체계의 차이와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통일 이후 교육제도 개혁이 실시되었으나, 이와 같은 개혁이 기존의 교육 불평등

³⁶ 손기웅·강구섭·양대중,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사례 연구-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한반도 군비통제』, 45집 (2009); Collier, I. L. and H. Siebert. *The Economic Integration of Post-wall Germany*, pp. 8~10.

³⁷ 김용민·정상돈·원준호,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pp. 81~133; 베르너 푸쉬라·김원식, 『통독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서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992), pp. 81~100.

³⁸ 선한승,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와 노동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3), pp. 12~20.

³⁹ 김용민·정상돈·원준호,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pp. 81~133; 베르너 푸쉬라·김원식, 『통독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pp. 81~100.

완화의 근본적 해결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서독이 서로 다른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통일 직전에 동·서독 모두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직 종사자의 자녀에 비해 사무직 종사자의 자녀가 유리한 교육기회를 갖게 되는 불평등이 존재하였다.⁴⁰ 독일통일 이후 서독의 체제에 따라 교육기관 확대 등 교육제도 개혁 진행이 급격하게 시행되었다. 이러한 교육제도 개혁은 교육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단기적 효과를 발생시켰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여 장기적으로는 실업률 증가 등의 결과를 낳았으며 오히려 계층에 따른 불리함을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⁴¹

동독과 서독은 특히 가족관이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서독의 경우 남성 외별이를 강조하는 보수적 가족관을 지니고 있던 반면, 동독의 경우 여성도 경제 활동을 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가족 문화와 성적 역할(gender role)의 차이는 체제통합이 발생시킨 구조적 문제와 결합되며 통일 이후 여성의 실업률과 보육관련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통일 이후 서독식 보수적 가족관이 강조되고, 기존 동독 여성이 종사하던 직군이 몰락하면서 동독에서 여성의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동독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던 직조업, 농업, 식품가공처리업은 통일 이후 국영기업 및 LPG(국가운영농업생산협동조합)의 폐쇄로 감소하게 되었고, 동독의 서비스업들 역시 서독 체제 아래 몰락하게 되었다.⁴² 이는 체제통합 과정에서 발생된 구조적 문제가 보수적 가족관의 강조와 결합되며 개인의 의사결정과 행태에 미친 영향으로 식별할 수 있다.

동독 여성의 대량 실업과 경제활동 제한은 아이들의 양육 및 보육 관련 사회제도의 축소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구 동독의 경우 자녀가 아플 시 유급휴가 제공,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추가 유급휴가 및 출산휴가 제공, 국가차원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⁴⁰ 사회주의 체제를 따른 동독은 공식적으로 동등한 포괄적 중등교육(Polytechnic Secondary School: POS)을 제공하였으며,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입학에 필요한 자격증인 아비투르(Abitur)를 획득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되었다. 반면 자본주의 체제를 따른 서독은 4학년 이후에 요건을 충족한(체육관 또는 문법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이 학문적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삼원제(tripartite)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Kesler, C. "Educational Stratification and Social Change: Evidence from German Unific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9, no. 5, (December 2003), pp. 467~482.

⁴¹ *Ibid.*, pp. 467~482.

⁴² *Ibid.*, pp. 467~482.

위한 사회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⁴³ 하지만 통일 이후 구 동독의 권위주의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제도가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일-가정 양립 붕괴가 발생하였으며 풀타임 고용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⁴⁴ 통일 이후 여성의 평균적 근로기간이 줄어들면서 연금제도, 직업훈련, 직업 교육 프로그램 수급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보장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구 서독의 경우 남녀 간 근로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 차이가 컸으나, 구 동독의 경우 기존 연금제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비교적 작았다. 하지만, 통일 후 서독식 연금제도 통합으로 전반적인 소득보장혜택은 증가하였으나 그 혜택이 주로 남성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⁴⁵

통일 이전의 동·서독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이민자가 거의 없는 상당히 동질적인 사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한 가족관 외 삶의 여러 가치관과 문화에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의 가치통합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두 독일 사회는 사소하게는 인사(greeting) 방식에서부터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적 선호도, 직업 의식과 근무 행태 등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와 같은 차이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었다.⁴⁶ 예를 들어 사회생활에서 서독 시민들은 일의 성과를 중요시 하는 반면, 동독 시민들은 동료와의 관계와 조화를 보다 중요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⁷ 또한 정서적 정의나 정체성 면에서도 동·서독 주민 간 차이가 있었다. 서독 주민들은 스스로를 진실되고 솔직하다고 정의하는 반면, 갈등이나 개성을 회피하는 동독 주민들은 보수적이고 솔직하지 않으며 기회주의적인 성향으로 정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반대로, 동독 주민들은 스스로를 충실하고 친절하며 타협할 줄 아는 성향으로 표현하는 반면 서독 주민들을 공격적이며 오만한 이미지로 정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정체성(self-identification)과 서로에 대해 가지고

⁴³ Gerhard, U, "German Women and the Social Costs of Unification," *German Politics & Society*, vol. 24, no. 25 (1991), pp. 16~33.

⁴⁴ Adler, M. A, "Impact of German Unification 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Rural East and W, A. est." *Sociological Focus*, vol. 29, no. 4 (1996), pp. 291~310; Gerhard, U, "German Women and the Social Costs of Unification," pp. 16~33.

⁴⁵ Gerhard, U, *Ibid.*, pp. 16~33.

⁴⁶ Zazilska-Florczuk, M., and A. Cie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SW Study* 35 (2011), pp. 19~23.

⁴⁷ Zazilska-Florczuk, M., and A. Ciechanowicz. *Ibid.*, pp. 19~23.

⁴⁸ *Ibid.*, pp. 19~23.

⁴⁹ *Ibid.*, pp. 19~23.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는 통일이후에도 사회적 가치통합을 지연시키는 요소로써 작용하였다.⁵⁰ 2000년대의 오스탈기(Ostalgie) 현상 역시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이 분단 이전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현상이다.⁵¹

4. 사례분석 소결

독일의 정치체제 통합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진은 ‘통일 방식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이해’, ‘정치적 체제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구조적 및 제도적 준비’, 그리고 단일화 될 ‘정치적 이념(i.e.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정치적 가치정향’이 정치체제의 통합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한 변수로 확인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통합에 의해 발생 가능한 특정 직군의 몰락이나 축소, 양 지역의 경제격차 및 경제활동과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사회적 통합(체제통합 및 가치 통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독일사례 분석 결과는 정치 및 경제체제의 통합 시 기존의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 제도적 기반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직업의식 및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주민 간 상호이해 뿐만 아니라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확인된 생활방식, 문화, 가치관의 차이는 가치통합의 주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독일은 인터넷이나 Social Network Service 등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분단과 통일을 겪었으며, 통일 전후로는 민족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에서 여러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보다 긴 분단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다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 및 가치관적 괴리는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⁵⁰ *Ibid.*, pp. 19~23.

⁵¹ 김현정,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마인샤프트 복원,”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6호 (2020), pp. 181~202; 이동기,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역사와 세계』, 제50집 (2016), pp. 29~61.

IV. 탈북자 대상 FGI 연구

1. 연구 설계 및 데이터 수집

독일통일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한반도의 남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주민 간 더 큰 괴리를 좁혀야 하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분단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문화적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외부 문화와 철저히 단절된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 통일이 현실화된다면 정치 및 경제체제의 구조적 통합을 위한 노력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 및 문화에 북한 주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진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새로운 정치 및 경제체제에 적응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담을 통해 남북통일 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 및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선행연구와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식별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기반으로 반구조적 질문지를 개발하였으며, 3개의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1회씩 총 3번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였다.⁵² FGI 그룹 구성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체제 적응 수준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탈북시기 및 한국 거주 기간을 기반으로 하여 나누었으며, 연구참여자의 연령, 직업, 탈북시기 등 인구학적 정보 외에 기타 이름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 식별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면담 참여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거나 타 참여자의 응답에 이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을 위해 구성된 참여자들은 <표 2>와 같다.

<표 2> FGI 그룹 구성

구분	탈북 시기 및 한국 거주기간	연령대	성별
그룹1	탈북 시기 2009년 혹은 이전/한국 거주 기간 10년 이상	20~45세	남성 4명
그룹2	탈북 시기 2010년 이후 2017년 이전/한국 거주 기간 4~10년	20~45세	여성 2명, 남성 2명
그룹3	탈북 시기 2017년~2020년/한국 거주 기간 2~3년, 최근 탈북	46~70세	여성 4명, 남성 2명

⁵² 동 FGI를 진행하기 이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진행을 위한 윤리심사를 거쳐서 IRB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IRB No.2004/001-008).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내용분석’, ‘지시적 내용분석’, ‘총괄 내용분석’의 3가지 방식중 개방형 질문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⁵³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질적 연구 상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인터뷰와 면담 혹은 관찰조사 더 나아가서 언론기사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텍스트로 전사하고, 연구 문제와 관련한 기준 범주에 따라 분류한 후, 이를 분석한다.⁵⁴ 본 연구에서는 Hsieh and Shannon(2005)에 의해 제시된 전통적 내용분석(Conventional Content Analysis)을 이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개념 간 관계 파악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⁵⁵ 일반적으로 내용분석은 일련의 절차를 거쳐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으로,⁵⁶ 특히 전통적 내용분석 방식은 연구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다는 고유의 특성을 말미암아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다양한 학문분야에 걸쳐 선호되는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로 내용분석이 이용되어왔다.⁵⁷

본 연구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녹음 기록을 전사하여 자료를 정리한 후, 작성된 전사본을 반복하여 세밀하게 읽으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단어와 문구, 문장을 추출하여 코드화 하였고,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 및 유사 코드를 묶어 정리하였다. 자료를 정리한 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주제와 각 주제에 대한 분류, 그리고 각 분류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분석틀을 재구성 및 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⁵³ Rosengren, K. E. *Advances in Scandinavia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In K. E. Rosengren(Ed.), *Advances in Content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1981), pp. 9~19.

⁵⁴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1호 (2014), pp. 49~68.

⁵⁵ Hsieh, H. F. and S.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5, no. 9 (2005). pp. 1277~1288.

⁵⁶ Weber, R. P., *Basic Content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 1990), pp. 41~70.

⁵⁷ 박양주·우영희, “국내 교육공학분야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제25권 2호 (2012), pp. 263~287.

3. FGI 결과 분석

FGI 결과는 앞서 독일통일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확인했던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변수들을 다시 한 번 검증 및 식별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담은 사회 통합 중 체제통합 차원의 구조적 문제의 식별에는 적합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체제 이해와 순응, 가치통합 관점에서의 어려움과 촉진요인 등의 식별에는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북한이탈주민 FGI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성별, 연령대, 출신 지역, 탈북 시기, 북한 거주시 직업 등 사회경제적 요소에 따라 다른 범위와 깊이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FGI 참여자의 변량(variation)은 분야별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과 정보를 파악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FGI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각자 고유의 경험을 토대로 발언하였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별 공통적으로 언급하며 상호 동의하는 내용들이 많았다. 면담 참여자들은 분야별 면담 및 토론과 더불어 북한 개방이나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주민 대상의 참여형 이념 교육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장기적 접근 방법을 강조하였다.

가.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해없이 한국에 오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체제 순응에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이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 법과 제도 관련 지식, 선거 참여 등을 통해 행사 가능한 개인의 정치적 권리, 법적 권리 등에 교육 방식 이해 부족으로 한국의 정치체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북한에서는 다양한 정치체제에 교육 방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상위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주민들 대부분이 다양한 정치체제에 대하여 이해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에서는 마스-레닌주의 관련 도서들까지 금지되는 등 김일성 3대 세습을 위한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다른 정치체제 관련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독립적 학습이나 논의 또한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법치주의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북한에서는 “법이나 범죄에 교육 방식 개념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인터뷰 중 일부)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재판 등을 통한 개인의 법적 권리 보호나 법적 분쟁에 교육 방식 개념 역시 부재하여 한국의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다수의 면담 참여자가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북한에서 겪어보지 않은 이념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 등 정치 참여의 권리 행사,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이나 재판,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 등의 개념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면담 참가자는 대한민국 거주 이후 몇 년 동안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으며, 몇몇 참가자는 재판이나 소송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남한의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이 도모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반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새로운 정치체제하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예: 선거참여, 법규준수, 납세의 의무 이행 등)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다수의 FGI 참여자가 생각하고 있었다. <표 3>는 이와 같은 분석내용에 토대가 된 인터뷰 내용들을 체제통합 시 요구되는 주요 ‘체제 순응’을 위한 변수 별로 발췌 및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의 인터뷰 내용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치적 이념에 대한 개념적 교육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위한 기본 권리와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들의 기본권, 준법정신 등이 오도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면담 중 자유와 인권, 그리고 법에 대한 단기 교육 이후, 이를 잘못 행사하는 경우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준법 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표 3〉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부문 주요 변수

체제통합의 주요변수		관련 인터뷰 내용 발췌
정치체제 이해/순응	정치적 이념/법과 제도의 이해	(다양한 정치체제에 대한 교육 및 지식) “북한에서는 마스-레닌주의 서적들이 금기도서였어요. 주체사상이 나온 뒤부터는...북한에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 된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스-레닌주의와 비슷한데...북한이라는 사회는 그냥 김일성과 자손들이 다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주의의 국가도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남, 30세)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없다보니) 민주주의는 그냥 개인의 자유만 강조하면서 약육강식으로 가고, 내가 저 사람을 앞지르지 않으면 완전히 도태되어서 죽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남, 56세)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북한)정부에서 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요...북한에서는 법과 범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여, 49세) “북한에서는 법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 짓) 만지고 훔치고 다해요.” “맞아요. 준법 정신이 없어요. 간부들은 법을 어기고 뇌물로 통하고 백과 인맥으로 사는..무법천지라고 보면 됩니다.” (남 56세와 50세 대화중)
	선거 참여	(선거 등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 기반 정치체제)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 몇 년 동안 (선거제도를) 잘 몰라서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일당독재 시스템에 살았다보니, 한국에 와서 TV를 통해 당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여, 49세)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재판,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한 이해) “북한에서는 재판을 못 가봤고 재판이 많지도 않아요...(변호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변호사를 채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써야 한다고 해서 국선변호사를 썼어요.”(여, 56세)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탈북자들 중에서 금방 하나원에서 나온 사람일수록 법을 더 떠드는 경향이 있어요...뭐 ‘인권 침해다’라고 그러고, 경찰들한테도 막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오래 한국사회를 경험한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갑자기 자유라는 것을 얻고 그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남, 50세)

*위 내용은 전체 인터뷰 내용 중 분석내용을 검증해줄 수 있는 직접적 언급이 있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임.

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흥미롭게도 다수의 면담자들은 정치체제 보다 경제체제 적응이 더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탈북이전에 이미 직간접적으로 시장경제를 경험한 바 있고, 한국에 와서는 경제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체험하면서 체제순응과 함께 가치적 공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면담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와 수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경제 이해도 또한 2000년대 말부터 급속도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2009년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와 화폐교환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이 장사 등을 통한 개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모든 면담 참여자들은 설명하였다. 지역에 따라 격차는 있을 수 있지만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급속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은행을 통한 예금,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고 ‘개인 자산’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금융 문해력이 현저히 낮으며, 직업의식도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은행의 이용이 드물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금융기관의 이용이 낮설었다고 설명하였다. 직업의식이나 직업윤리에 대한 이해의 차이도 두드러졌는데, 인터뷰 발언들을 종합하였을 때, 대부분의 북한 주민은 개인의 선택권 없이 배정된 일자리를 받게 됨에 따라 일에 대한 ‘보상’과 일을 통한 ‘성취’에 대한 개념과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일자리 환경 역시 개인의 인맥과 관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에서는 개인의 성취보다는 직장 내 사람들과의 관계, 상관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았으며, 상관과의 관계에 따라 출퇴근이나 조퇴를 마음대로 하거나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는 등 직업윤리 인식이 대한민국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직업의식과 윤리의 차이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논의했던 사회통합의 주요 변수 중 가치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와 결속’ 및 ‘문화적 요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순응과 더불어 가치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체제통합이 완성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분석이 이루어진 인터뷰 내용의 일부는 <표 4>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4〉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 부문 주요 변수

체제통합의 주요변수		관련 인터뷰 내용 발췌
경제 체제 이해/순응	자본주의 및 시장경제 이해	(시장경제 이해) “2009년 화폐교환과 고난의 행군이 지나가면서 장마당이 활성화 되었고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 접경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장경제를 경험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 37) “북한 사람들이 지금은 시장에 의존해서 살잖아요. 장사를 하면서...북한 당국이 돈을 뺏어만 가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거의 20년 동안 시장을 통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여, 56세; 여, 66세; 여, 65세의 대화 중)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 이해)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안 해, 남한에서는 은행에서 자기 돈 찾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은행에 넣어도 다시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여, 66세) “북한의 은행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저축소/저금소’예요. 개인거래를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돈을 찾기 어려우니까.” (여, 56세)
	고용/직업/소득 등	(고용 방식과 직업 선택의 차이) “일하는 것을 제한하고 북한 당국에서는 (나라에) 돈 되는 것만 해라라고 제한 해요. 기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한된 일만 하게 하죠.” (여, 65세) “(북한 거주 당시) 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용품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어 무보수로 일했어요. 월급이 없음에도 가서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잡아가기 때문이었어요.” (여, 49세)
가치통합의 주요변수		관련 인터뷰 내용 발췌
문화적 요인	가치관 및 정치 선호도	(가치관과 정치/경제체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 경험과 만족도) “한국에 와서는 하루만 일해도 10만 원이라는 보수를 받는 것이 좋았어요...” (여, 49세)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할) 일하고 남은 시간에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서) 한국에 오니까 자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여, 66세) “(한국에) 와보니깐 굉장히 안정된 사회이더라구요.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강하고 국민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필품이나 금전적인 것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저희 할머니는 70년을 북한을 위해서 일하시던 본인데 여기 와서 매달 7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으시더니 ‘공산주의가 어디 갔나 했더니 한국에 있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보면 북한에서 막연하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대해 가지고 있던 반감) 한국에서 살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남, 30세)
사회적 관계와 결속	사회적 선호도	(직업윤리/ 사회적 관계 지향의 차이) “북한에 있을 때는 (규율이 없어서) 자유롭게 일했죠. 일하다가 반장과 실장에게 조퇴하겠다고 하면 조퇴서 같은 것 없이 그냥 가라고. 회사에서 술 마시면 저로 좋다고 마시고. 한국에서는 일하다가 술 마시거나 (서로) 농담도 못하고, 마음대로 출퇴근도 못하는 게 (불편했어요.)” (남, 56세)

*위 내용은 전체 인터뷰 내용 중 분석내용을 검증해줄 수 있는 직접적 언급이 있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임.

북한에서의 강압적인 일 배당 문화와 일을 통한 성취감 부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배급체제의 몰락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또한, <표 4>에 포함된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북한 거주 당시 강압적 교육에 의해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 역시 일에 대한 보상과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의 수혜를 경험한 이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아닌 개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을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이해 가능한지 확인하는 질문에 면담 참여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이미 배급제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일 후 시장경제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적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사람들은 원래 열심히 일해서 (시장경제에 적응을 잘 할 거예요), 북한에서는 일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북한에서는 일 해도 돈을 안주니까.”

“맞아요, (북한 주민들은) 조직 생활도 강하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도 국가에서… 쌀 한 되 값 월급도 못 주니까 생계를 위해서 따로 장사도 하고…”

(여(66세)와 여(65세)의 대화중)

이와 같은 발언과 다른 면담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reward)’ 경험과 정부의 안정되며 표용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통일 이후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적응과 이에 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던 반감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사회 문화적 적응

북한의 교육체제와 교육 내용은 대한민국의 교육체제 및 과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적응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익숙지 않음과 언어의 차이로 인한 취직 및 사회적응의 어려움, 대중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등이 있었다. 북한의 지역에 따라 외부의 소식과 문화 노출 정도는 다른 것으로 보이나,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 하에서 김일성 3부자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당에 대한 충성과 가치관을 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교육체제에 관한 면담을 통해 교육체제의 차이, 역사 교육의 차이, 성교육의

부재, 교육과 직업과의 괴리, 전문성 역량을 위한 교육의 차이 등이 파악되었으며, 이들은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동질적인 사회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들로 식별되었다. 북한에서는 같은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동일 학생을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되며, 사제관계의 관계성, 학부형과 교사의 관계성이 훨씬 긴밀하며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⁵⁸ 특히, 담임 선생님과 관계가 긴밀하다보니 학교 선생님이 방과 후 보육의 역할을 대신 해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아이가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이러한 보육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육아와 보육 방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독일 사례와는 달리 남북 주민들은 동일한 민족이라는 점과 6·25 이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공유한다는 점 외에는 언어 및 문화적으로 이미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70년 넘게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해온 만큼 외부의 문화에 무지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개방된 사회인 대한민국은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활발한 사용으로 외부 문화나 유행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남북 주민들의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크게 작용하여 두 집단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이질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 데도 언어의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였으며, 북한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대한민국에서의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대중문화에서의 차이 역시 크게 느끼고 있었다. <표 5>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 인터뷰 내용 중의 일부를 주요 변수별로 발췌 및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⁵⁸ 초등학교가 5년제라면 5년 동안 담임이 고정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역시 1학년 때 담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5〉 사회 문화적 적응 부문 주요 변수

체제통합의 주요변수		관련 인터뷰 내용 발췌
기타 체제 이해/ 순응	교육체계 이해	(교육체계 및 방식, 내용의 차이)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이 크게 달라요. 일단 교육 방식이 다르고, 교육 내용 자체도 한국에서는 세계역사와 같은 역사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 그들의 혁명 역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 37) “북한에서는 한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역사를 배웠는데 남한의 책을 읽다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여, 49) “북에서 오신 어머니들의 경우 (선생님들이) 북에서 만큼의 관리를 (해주기를) 기대(해요). 북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녀를 학교 보내면, 낮 시간 동안에는 학교의 담임 선생님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아 관리를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여, 37)
가치통합의 주요변수		관련 인터뷰 내용 발췌
언어 및 문화적 요인	언어의 차이	“(한국에 와서) 어려웠던 것이 한글문화. 여기는 외래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남, 50세) “언어 문제가 해결되어야 (교육을 받고) 자격증 같은 것을 따고 일을 할텐데,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여, 56세)
	대중문화 및 언론매체 이해도	“북한은 성인물이나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보다가) 걸리면 잡혀가거나 총살 당 할 수 있어요.” (남, 56세) “한국 가수들은 ‘자본주의 날라리’ 이미지. (여, 49세)” “북한은 김일성 찬양 노래만 있는데, 한국은 사랑 노래와 같이 개인을 중시하는 노래만 있어서 놀랐어요.” (여, 56세)

*위 내용은 전체 인터뷰 내용 중 분석내용을 검증해줄 수 있는 직접적 언급이 있는 부분을 발췌한 내용임.

면담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통일 이후 조속한 사회통합이 실현되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교육과 함께 새로운 정규 교육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들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과 김일성 3부자 정권의 부당성에 대한 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효과적인 정보 전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 콘텐츠의 이용, 체험 학습 등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특히 탈북 이후에도 지속되는 이념적 차이, 정치적 권리 행사에 대한 무지,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교육 및 개인 권리 행사를 위한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표 6〉은 면담 중에 제안되었던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들이 언급된 인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6〉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조치관련 의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견 (인터뷰 내용 발췌)	
교육의 필요성	“남북한이 통일되고, 새로운 정부가 북한의 행정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구조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북한에 있는 국민에 대한 사상교육을 해야 해요.” (남, 30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에요). 북한에서는 세뇌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남한에 오면 취업 교육만 시켜요. 그래서 역사왜곡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교육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는데) 하나원에서는 할 시간이 없다고 실행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런 것 정도만 매우 간단하게 한 두 강의로 알려주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남, 56세)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 대상 교육체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민주주의 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선거라는 것이 무엇이고, (투표와 같은)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남, 50세)
교육 방식	“북한에서 (위험하지만) 제일 인기 있는 것이 한국 드라마예요...이미 평양에 있는 (고위 간부 집안)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젖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통일되기 전부터 계속 들여보내는 거예요.” (남, 30세)

라. FGI 분석 소결

면담 결과, 독일통일 사례에서 관찰된 정체성과 가치관의 차이가 유사하면서도 더 크게 드러났기 때문에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통일 직후의 주민 대상 교육도 중요하지만 향후 정규 교육과정에 역사, 정치,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문화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체성 형성과 동시에 다문화성의 포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정치적 이념에 대한 교육, 민주주의 체제 내 개인의 정치적 권리 행사와 준법정신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시급해 보이며, 경제적 이념과 금융 문해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함께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여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집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 체계의 통합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왜곡되었던 역사 교육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의 수혜 경험 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체제 순응도를 강화시킨 만큼,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여러 면담자들이 제안하였듯이 문화 콘텐츠의 노출과 체험학습 방식의 교육을 통해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가치관의 괴리를 좁힐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북통일이 실현되었을 경우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변수들을 이론적 고찰과 독일통일 사례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FGI 조사를 수행하여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기존 사회 통합적 관점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들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 연구들은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개인 단위 적응과 통합에 초점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사회통합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으로 구분한 Krechel (1999)의 연구에 기반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어떠한 요인들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지를 예측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FGI 조사의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다.

한편, 별도로 이루어진 독일통일 사례 실증적 분석은 Krechel의 연구내용과 일치하는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즉 체제통합은 구조적 통합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순응과 가치통합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실현 가능하며,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이 모두 달성되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1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FGI 조사도 Krechel의 이론적 설명과 독일통일 사례에서 관찰된 사회통합 관련 요인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주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남북한 간의 문화적 및 가치지향의 차이가 동·서독 간에 관찰되었던 차이보다 현재 훨씬 더 크고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예상되었다. FGI 조사 결과, 사법제도, 선거제도, 정치제도 등의 정치체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율성 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이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체제에 대한 적응의 경우, 북한 내부에 이미 시장경제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데다가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가치를 경험한 경우,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와 순응도가 증가하며 가치 통합적 요인인 개인의 정치 선호도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직업윤리나 사회적 가치관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외에도, 남북한 간 언어 및 문화의 차이, 교육체계에 대한 차이 등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통일 이후 구조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가치적 괴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 및 경제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들을 교육시키고 전파시키기 위한 콘텐츠 및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준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새로운 체제 하에서 개인의 직접적 가치 경험이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문화 콘텐츠 및 체험학습(예: Role Play 등을 이용한 학습)의 방식을 이용한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주의 등 정치적 이념 및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 선거제도 등 개인의 정치적 권리 행사 방법에 대한 이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사회보장제도 및 복지혜택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방법 등을 체득하기 위한 교육이 효과적인 체제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포용적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을 통해 새로운 행정 시스템과 사회 구조 안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며, 특히 주민들이 복지혜택의 수혜, 지역사회 서비스 경험, 일에 대한 보상의 경험 등 직접적 가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체제와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 가치 공유를 유발하는 것을 가치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단하였다.

동 연구는 사회통합의 주요 변수들을 체제통합과 가치통합의 영역에서 식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례분석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여 남북한 간 사회통합의 추진에 있어 극복되어야 하는 차이와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FGI 내용의 분석으로는 각 변수별 심도 있는 수준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대상 표본수를 늘려, 각 요인별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 수준의 분석결과를 도출한다면 사회통합 저해요소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추후 연구 방향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 제출: 4월 6일 ■ 심사: 5월 26일 ■ 채택: 5월 31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석진·양문수.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김용민·정상돈·원준호.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 베르너 푸쉬라·김원식. 『통독의 경제적 평가와 한반도 통일』. 서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1992.
- 선한승. 『통일독일의 경제사회문제와 노동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1993.
- 신효숙·김창환·설동훈·채정민·장인숙·왕영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표·지수모형 및 측정도구 개발』.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6.
- 오영훈·강일규·윤형한·유태균·김진욱. 『취약계층 평생직업훈련의 사회통합효과 분석 (2편)』.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윤인진.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서울: 아연출판부, 2014.
- Algan, Y., A. Bisin, A. Manning and T. Verdier. *Cultural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Collier, I. L., and Siebert, H. *The Economic Integration of Post-wall Germany*. Kiel : Kiel Inst. of World Economics, 1991.
- Deutsch, K. W.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8.
- Furtado, D. and S.J. Trejo. *Inter-ethnic Marriages and Their Economic Effects*. In A.F. Constant, K.F. Zimmermann (Ed.),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Migration*. UK: Cheltenham, 2013.
- Gathmann, C. and N. Kelle. *Citizenship and Social Integration*, IZA Working Paper. Muenster: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2017.
- Krechel, R. *Social Integration, National Identity and German Unification*. J. T. Marcus ed. *Surviving the Twentieth Century: Social Philosophy from the Frankfurt School to the Columbia Faculty Seminar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9.
- Robinson, V. *Defining and Measuring Successful Refugee Integration*. Proceedings of ECR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ion of Refugees in Europe, Brussels: ECRE, November 1998.
- Rosengren, K. E. *Advances in Scandinavia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In K. E. Rosengren(Ed.), *Advances in Content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1981.
- Weber, R. P. *Basic Content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 1990.

2. 논문

- 고상두. “통일 이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한 동서독 지역주민의 인식.” 『유럽연구』. 제28권 2호, 2010.
- 권숙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3집 1호, 2014.
- 김석진.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집 1호, 2019.
- 김성중.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2호, 2012.
- 김현정. “독일통일, 동·서독 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게마인샬프트 복원.” 『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6호, 2020.
- 박양주·우영희. “국내 교육공학분야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적용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교육공학연구』. 제25권 2호, 2012.
- 서병철. “독일 정치통합의 과정과 원동력.” 『통일문제연구』. 제5권 4호, 1993.
- 서창록.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1호, 2010.
- 손기웅·강구섭·양대중. “동서독 간 정치범 석방사례 연구-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한반도 군비통제』. 45집, 2009.
- 송태수. “유럽연합 이민정책의 현황과 전망.” 『민족연구』. 제39권, 2009.
- 윤인진.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제6권 1호, 2019.
- 이동기. “독일통일 후 동독정체성.” 『역사와 세계』. 제50집, 2016.
- 이수상. “언어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제31권 1호, 2014.
- 이주호·배정환.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충청북도 내 북한이탈 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7호, 2011.
- 전성우. “통일독일에서의 내적 통일의 문제.” 『사회과학연구』. 제39집, 2000.
- 정병기.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통일 이후의 구동독: 개혁과 통일의 갈등.” 『이론』. 1997년 여름호, 1997.
- 정용길.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저스티스』. 제134권 2호, 2013.
- 허준영.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Adler, M. A. “Impact of German Unification on The Status of Women in The Rural East and W, A. est.” *Sociological Focus*. vol. 29, no. 4, 1996.
- Adsera, A., and A. Ferrer. “Factors Influencing the Fertility Choices of Child Immigrants in Canada.” *Population Studies*. vol. 68, no. 1, 2014.
- Ager, A. and A. Strang.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vol. 21, no. 2, 2008.

- Avitabile, C., I. Clots-Figueras and P. Masella. "The Effect of Birthright Citizenship on Parental Integration Outcom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56, no. 3, 2013.
- Axel Schmiat-Gödelitz. "독일통일 후 내적통합: 성과, 도전, 그리고 전망." *FES Information Series*. 2012년 no. 4, 2012.
- Bisin, A., E. Patacchini, T. Verdier, and Y. Zenou. "Are Muslim immigrants different in terms of cultural integration?"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6, no. 2-3, 2008.
- Cameron L., N. Erkal, L. Gangadharan and M. Zhang. "Cultural Integration: Experimental Evidence of Convergence in Immigrants' Preference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vol. 111, 2015.
- Gerhard, U. "German Women and the Social Costs of Unification." *German Politics & Society*. vol. 24, no. 25, 1991.
- Hainmueller, J., D. Hangartner and G. Pietrantuono. "Catalyst or Crown: Does Naturalization Promote the Long-Term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11, no. 2, 2017.
- Hsieh, H. F. and S. E., Shannon.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5, no. 9, 2005.
- Kesler, C. "Educational Stratification and Social Change: Evidence from German Unific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9, no. 5, 2003.
- Landecker, W. S. "Types of Integration and Their Measu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56, no. 4, 1951.
- Laurentsyeve, N. and A. Venturini. "The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the Role of Policy – A Literature Review." *Intereconomics*. vol. 52, no. 5, 2017.
- Veen, H. J. and C. Zelle.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Priorities in Eastern and Western Germany." *German Politics*. vol. 4, no. 3, 1995
- Westerhof, G. J. and C. L., Keyes, C. L.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Perceptions and Consequences of Stability and Change Among Middle-Aged and Older East and West German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vol. 61, no. 5, 2006.
- Zazilska-Florczuk, M., and A. Ciechanowicz. "One Country, Two Societies? Germany Twenty Years after Reunification." *OSW Study*. 35, 2011.

Abstract

Factors for Social Integration after Korean Reunification: Analysis based on the FGI with North Korean Defectors

Shin, Jae Eun, Joe, Moonyoung and Lee, Suk-w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and analyze the major factors that may affect inter-Korean soci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of social integration factors is developed based on Krechel(1999)'s study that identified social integration as the aggregation of system integration and value integration. The empirical case study of German reunification led to implications aligned to Krechel's theory. Based on this theoretical framework, we conducted FGI with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sults are predictively analyzed to understand how the major social integration factors may promote or impede soci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and directions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fter Korean reunification effectively.

Keywords: Korean reunification, social integration, system integration, value integration

